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

2024. 3.

운영위원회 전문위원

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(의회사무국)

검 토 보 고 서

2024. 3. 15.

운영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(의회사무국)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
- 제출일자: 2024. 2. 28.
- 회부일자: 2024. 2. 28.
- 검토기간: 2024. 3. 5. ~ 3. 7.

2. 근거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5조(추가경정예산)
- 「지방재정법」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

3. 추경예산안 편성 요인

-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반영
- 효율적인 회의장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 반영

4. 추경예산안 내역(의회사무국 소관)

가. 세입예산: 해당 없음

나. 세출예산

(단위: 천원)

구 분	예산액	기정액	증 감	증감률[%]
의회사무국	4,436,241	4,418,817	17,424	0.39
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	1,626,074	1,613,950	12,124	0.75
합리적인 인사행정	7,682	7,682	0	0
의회 발전 교육 및 교류	394,600	391,600	3,000	0.77
인력운영비 (의회사무국)	2,292,489	2,292,489	0	0
기본경비 (의회사무국)	115,396	113,096	2,300	2.03

주요 편성 내역

- 국가유공자 근조기 제작비 및 배송료 4,800천원 신규 편성
- 상임위원회실 TV모니터 설치 6,300천원 신규 편성
- 후반기 개원준비 위탁교육비 3,000천원 신규 편성

5. 검토의견

- 의회사무국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4억 3,62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0.39% 증가한 1,74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함.
-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역으로 국가유공자 근조기 제작비 및 배송료 480만원 신규 편성, 상임위원회실 TV모니터 설치 등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비 697만 4천원 신규 편성, 하반기 개원준비 위탁교육비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.
- 국가유공자 근조기 제작비 및 배송료는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국가유공자 사망 시 달서구의회 명의를 근조기 근정 사업비로 이를 통해 보훈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그 외는 효율적인 회의장의 관리 및 운영과 의원의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비품구입비 및 교육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본예산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편성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.

<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>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42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·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, 시·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.

제145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재정법

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